도의회 최초 여성 의장 선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국주영은 의원
제1부의장 이정린 · 제2부의장에 김만기 의원
김관영 도지사 등 참석 본회의장서 개원식

국주영은 의원이 전북도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 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1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 의장단 선거에서 총 40표 중 34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전북도의회 의장에 여성의원이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제8·9대 전주시의원을 지내고, 지난 2014년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11대에 이어 12대까지 내리 3선을 했으며, 11대 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민선 8기 도정 및 교육행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전라북도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양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강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장단 선거에서 제1부의장에는 32표를 얻은 이정린 의원(남원1), 제2부의장에는 34표를 얻은 김만기 의원(고창2)이 선출됐다.

이정린 부의장은 제6·7대 남원시의원과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부의장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전라북도의회 개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도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김경수 기자

지난 1일 제392회 전북도의회 임시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제12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가 진행됐다. 전반기 의장단에 선출된 국주영은 의장(사진 가운데), 김만기 부의장(왼쪽), 이정린 부의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文 정부 · 이재명 수사 대응"

민주, 정치보복 대책위 구성
부위원장에 박균택 전 검사장
김의겸 의원 등이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맡은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에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4일) 1차 공개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균택 전 검사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으로는 김영배, 김의겸 의원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김회재, 임호선, 최기상 의원이 포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의정부지검장,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차장, 최기상 의원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낸 바 있다.

신 대변인은 대책위 활동 방향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대응을 할 것이고, 특히 인사나 정치에 대한 부분"이라며 "지금까지의 보복수사 현황을 정리해서 고소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의원 관련 사항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정권교체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퇴직 압박에 대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수사 뿐 아니라 이재명 의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위원회 대응 범위에 포함된 셈이다. /뉴시스

화물노동자 파업 쟁점 안전 운임 법 개정안 발의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품목 9종 확대
안전운임위 산하 사무국 설치 '운영 지원'
위반시 3자 신고 허용, 관할청 조치 강화
심상정 의원 "제도 상시화와 운영 인프라 구축"

지난달 화물노동자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 운임제'에 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일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다만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시한은 올해 말 종료된다.

따라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게 심의원 측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기존 2종에서 9종으로 늘려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 이외 추가된 품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 운송, 대규모점포와 무점포의 운송 등이다.

또한 제도 상시화와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산하 사무국 설치를 통해 안전운송원가 산정과 적용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갖추도록 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위반 제3자 신고 허용과 관할관청의 사후조치 강화 조항을 신설한다.

심상정 의원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상시화 및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당대표 출마 결심… 이재명 되면 계파갈등 심화"

박지현 "민주, 다시 국민 위한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

6·1 지방선거 참패로 사퇴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8·28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당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민주당을 다시 국민을 위한 정당,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청년 출마자 연대 '그린벨트'의 결과 공유 행사에 참석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 달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며 조만간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다만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제가 아직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며 "그래서 제 출마 당락은 이제 우리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의 당권행에 대해서는 "일단 이재명 의원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 우리 당내 계파 갈등이 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고 있고 분당의 우려도 있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이시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도 동조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지점은 이 의원이 지금 여러가지 수사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방어하기에 급급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 민주당이 정말 해야 하는 민생은 실종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크다"고 전했다. /뉴시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국정운영 동반자 되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주민중심 자치분권 2.0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막되는 지방정부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정착,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시대적 소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 앞에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불균형, 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의 다양성 강화, 주민참여제도 확대 등 해결해야 할 자치분권의 과제들이 있다"고 했다.

지자체장들의 선도적인 역할로 성공적인 자치분권 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중앙·지방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지방정부가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장들의 각자 속한 정당은 다르지만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서로 노력해 자치분권 2.0 시대의 정착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